

경기교통공사는『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수도권 확대 사업 감리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수도권 확대 사업 감리용역
- 나.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 다. 예정금액 : 금110,000,000원(금일억일천만원)(부가세포함)
- 라.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 입찰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자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2024-23호, 2024. 12. 3.)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로 규제되지 아니한 업체
- 마.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다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정보통신)[3572]**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1320]** 개설등록을 한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 감리원을 보유한 업체**
- 사.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으로 신고한 업체**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를 불허하며, 만약 사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발 업무를 지문 또는 지원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본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 아.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실적이 있는 업체(이를 입증하는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에 의한 감리제한 및 행정처분 업체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음(부정당업체 입찰참가제한여부 증빙서류 제출)
- 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거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
- 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함.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 가. 공고기간 : 2026. 7. 16. (목) ~ 2026. 7. 24. (금) 14:00
- 나. 개찰일시 : 2026. 7. 24. (금) 15:00 이후 입찰 집행관 PC
- 다.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제출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특기사항 : 예정가격 산정시(설계, 지급)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는 사후정산

<보험료 사후정산>

-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의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서약제가 적용됨.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및「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

4. 낙찰자 결정 등

-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결정합니다.
- 라. 조달청 개찰결과 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통지를 한 것으로 보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 공사로 적격심사 자료를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적격심사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2026.7.1.)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P.Q 미수행)」을 적용합니다.
- 바.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비영리법인은 의무적용) 중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 적격심사 항목 중 이행실적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2026.7.1.)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P.Q 미수행)」을 적용합니다.

5.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적격심사, 제한경쟁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행안부 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기교통공사는 청렴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과정(완료 이후 포함)에서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 031-860-1582 (감사담당자)

- 홈페이지 : <https://www.gtrans.or.kr>

- 주 소 : (11473)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플라자II 3층

9.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8항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공채(1.5%)의 매입증명서,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퇴직충당금 지급증빙(관련법령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용역 완료시 대금의 사용실적보고를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자.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차. 낙찰자로서 계약체결하는 자는 본 용역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특수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각종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따른 법률상·계약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

○ 과업·제안서 관련 : 경기교통공사 ITS사업추진단 (☎031-870-9365)

○ 입찰·계약 관련 : 경기교통공사 회계팀 (☎031-870-9354)

청 럽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붙임2]

(뒷면)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 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경기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 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기교통공사 및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붙임3]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이행 협약서

1.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 작성 시 적용한 노임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경기도생활임금조례를 준수한 것이며,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의 인건비는 입찰서 / 견적서 /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근로자(외주근로자 포함)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협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협약서를 제출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수행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법률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

인권경영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권경영과 차별 없는 사회구현을 지향하고, 경기교통공사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임직원·협력사·지역사회 등에 대한 인권 존중의 책무를 준수하기 위해

경기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중대재해 사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 결여, 인권 침해적 활동을 행하는 단체 및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환경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한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분임)재무관 귀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 월 □□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경기교통공사사장 귀하